

수권정당을 위하여 - '중산층 정치'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목 차

■ 요약	1
1 중산층 패러독스	9
2 ‘중산층 정치’ 프레임	19
3 ‘중산층 정치’의 정책방향	25

요 약

「수권정당을 위하여 - ‘중산층 정치」

1. 중산층 패러독스

- 꿈꾸는 중간, 꿈의 계층 - 계층소속감
 - 국민의 다수가 스스로 재산과 소득에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기준을 높여 대다수가 (빈곤층이 아닌) 서민으로 인식, 중산층을 ‘꿈의 계층’으로 이상화
- 절망(絶望)과 희망(希望)사이, 이망(二望)계층 - 계층상승인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계층상승과 경제생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절망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음
- 불안한 표준계층 - 계층정치의식
 - 중산층은 ‘불안한 표준계층’으로 누가 중산층의 신뢰를 얻는지에 따라 어떤 정당이 수권정당이 될지가 결정

2. ‘중산층 정치’ 프레임

- 희망의 정치
 -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느 순간 ‘중산층’이 ‘금기어’처럼 되었음.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꿈’을 대변해야
 - 수권정당은 분석의 정당, 항의의 정당이 아니라 실천의 정당, 문제해결

의 정당임.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동반성장', '혁신경제'의 해법을 전면에 내세워야

- 이는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계층상승하는 전반적 상향이동 전략 (general upward-mobility strategy)을 기안하는 것임

○ 통합의 정치

- 수권정당은 부자를 적대하고 중산층을 무시하는 부자 vs 서민의 제로섬 게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중산층 강국으로 만드는 통합의 정치 지향
-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으로서 시끄러운 소수의 배제의 정치, 격돌의 정치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재건, 확대, 강화하는 포용의 정치,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열망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를 대변해야
- 이는 정치불신을 가속화시키는 무임승차의 '루저'와 승자독식의 탐욕간의 그릇된 양자택일을 넘어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을 실현하는 '성공의 정당'을 자임하는 것임
- 또한 이는 진보의 '온정 vs 냉혹'의 구도와 보수의 '유능 vs 무능' 구도를 넘어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정당'의 면모로 일신하는 것임. '따뜻하지만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진보정당은 '냉혹하지만 유능'한 것처럼 위장한 보수정당에게 필패

3. '중산층 정치'의 정책방향

○ 민생민주

- 반독재민주화 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민주개혁'으로 자임.

- 최근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으로 자칭.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과의 후보단일화 또는 연대 등, 반사이익 선거연합을 반영
-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의 명칭은 총선과 대선 패배로 재검토 요구받음.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과급력을 가질 수 있는, ‘진보’의 유의미한 연대세력이 더 이상 없는 상태
 -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의 속편한 고정관념에 안주하는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민생민주’의 새로운 명칭 필요
 -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중시함과 함께 ‘민주’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명칭
 -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변화를 반영하는 ‘민생’과 ‘민주’의 방향전환 또는 강조점 이동 필수

① 민생

- ‘민생’을 앞세움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제일주의 정당’임을 자임
- 여기서 ‘민생’은 중산층을 재건하고 확대하는,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에 근거
- 성장을 경시하는 구좌파의 ‘분배경제론’과 우파의 ‘소수 기득권 경제성장론’과 대비하여 ‘혁신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성장과실을 서민의 중산층화와 중산층의 강화로 돌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에 입각한 중산층 성장경제론으로 방향전환
- 민생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단순한 안전망(safety net)을 넘어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보통사람의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약대(spring board)로 기능하는 기회의 네트워크(opportunity net)를 구

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보편 vs 선별의 철지난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재도전 복지 전략'을 기안해야

② 민주

- '민주'는 민주화 시대의 민주 vs 반민주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격들의 정치'를 넘어 민주화 이후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복원, 정치를 정상화하는 '신뢰의 정치'
- '박근혜 정치'는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의 정치에 대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협조를 활용, 정치를 행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여론조사의 상시화에 대응해 진영간 여론조사 우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실종의 정치'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치의 '행정화'와 '시민운동화'의 시끄러운 소수의 그릇된 좌우 편향을 거부하고 오직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꿈을 대변하는 '정치 정상화'의 정당을 자임해야

○ 중산층 재건

- 중산층이 되기를 원하는 서민과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여 중산층을 강화하는 중산층 재건 노선은 60년 전통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통성이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꿈
-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자 정치를 복원하는 신뢰의 정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버린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의 실천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수권정당을 위하여 - '중산층 정치'

이진복(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중산층 패러독스

○ 꿈꾸는 중간, 꿈의 계층 - 계층소속감

- 국민의 다수가 스스로 재산과 소득에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기준을 높여 대다수가 (빈곤층이 아닌) 서민으로 인식, 중산층을 '꿈의 계층'으로 이상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공식중산층(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의 50~150%, OECD기준 중산층) 비중은 커지는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 체감중산층

- 공식중산층 비중은 2009년 66.9%에서 2013년 69.7%로 2.8% 상승한 반면, 체감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54.9%에서 51.4%로 오히려 3.5% 감소 (통계청)
- ※ 공식중산층은 1992년 76.3%로 정점을 찍은 후, 2008년 63.1%까지 하락했다가 2013년 69.7%로 소폭 상승
- ※ 중산층의 대표 가구가 1990년대 '30대 후반-고졸-제조업-남성 외벌이'에서 2010년 '40대 후반-대졸-서비스업-남녀 맞벌이'로 변화했음
- 특히 공식중산층 중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

		체감계층		
		고소득(0.8%)	중산층(51.8%)	저소득(47.4%)
OECD 기준계층	고소득(30.8%)	0.8	22.7	7.4
	중산층(61.9%)	0.0	27.9 〈45.1〉	34.0 〈54.9〉
	저소득(7.3%)	0.0	1.3	6.0

주: < >는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체감중산층 및 체감저소득층의 비중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은 매달 515만원을 벌어서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1년에 3.5회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임. 반면 현실의 모습은 매달 416만원을 벌어서 252만원을 쓰고, 27평짜리 주택을 포함 3.8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만원 상당의 외식을 세 차례 즐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1.1%를 기부후원하며, 1년에 3.1회 무료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이상적인 모습	현실의 모습	격차
소득 자산	月세후소득(만원)	515	416	99
	순자산(억원)	6.6	3.8	2.8
	주택가격(억원)	3.7	2.2	8.3
	주택평수(평)	34.9	26.6	8.3
삶의 질	月생활비(만원)	341	252	89
	月외식횟수(회)	4.0	3.2	0.8
	회당 외식비용(만원)	12.3	6.3	6.0
사회 기여	기부후원금/소득(%)	2.5	1.1	1.4
	年무료봉사횟수(회)	3.5	3.1	0.4

- 객관적 중산층과 달리 주관적 중산층의식이 위축된 반면,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스스로 소득과 재산에서 중간이라고 생각함

○ 중산층의식

- 통계청 조사 2013년 체감중산층은 51.8%이지만 한국사회학회 조사 체감중산층은 20.2%에 불과
- ※ 가구소득만이 아니라 직업에 따른 계급적 지위, 교육수준,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는 복합적 기준 적용하여 객관적 중산층을 판별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8%가량이 중산층으로 분류, 그중 핵심 중간층은 34.05%. 주변 중산층은 28.75%임.
- 중산층의식은 지속적으로 하락, 80년대 후반에 전체 인구의 60~80%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했다면, 90년대 중반에는 42%가 그렇게 인식

○ 소득과 재산의 중간의식

- 10점 척도의 월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들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32.4%가 자신의 소득 수준을 중간, 즉 5라고 평가. 4와 6을 포함하면 65%에 달함
- 한국은 자신이 인식한 소득수준이 중간으로 모여 있는 반면 OECD 국가의 평균은 한국에 비해 하위층과 상위층으로 자신의 소득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격히 높은 편임
- ※ 한국인은 32.4%가 자신의 소득이 중간이라고 평가한 반면 OECD 국가의 평균은 19.63%에 머물고 있음. 그리고 한국인의 3.3%, 6.6% 응답자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이 각각 1(최하위 10%), 2(그다음 하위 10%)라고 답한 반면 이 비율이 OECD 국가에서는 8.7%, 8.5%로 훨씬 높음. 반면, 자신의 소득이 10(최상위 10%), 9(그다음 상위 10%)라고 응답한 자들의 비율이 한국에서는 각각 0.1%와 0.2%인 반면 OECD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2.2%, 1.7%에 달함
- 자산의 계층화는 소득의 계층화에 비해 보다 심각하지만 중간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존재함. 중간 5에 위치한 응답자의 비율은 가장 많은 30.01%이고, 4와 6을 포함하면 50%를 넘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국민의 대다수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가 빈곤층이 아니라고 생각함

○ 서민의식과 중산층의식

-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67.0%,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5.3%,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5.7%임
- 국민은 서민을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80.0%)' 또는 '필요한 지출을 못하는 사람(46%)'이라고 생각
- 국민은 소득계층(10분위)의 위치에서 서민을 '3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계층(17.3%)'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많음
-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인 81.6%는 본인을 빈곤층에 포함시키지 않음
- 국민은 중산층을 소득계층 상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 중산층은 5~7분위라는 응답이 전체의 20.3%였으며, 7~8분위(14.3%), 6~7분위(13.0%)였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행복에 미치는 계층의 효과는 객관적 지표로 측정했을 때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남. 결국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가 객관적인 위치보다 행복에 더 중요함
- 행복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감.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의 여부가 삶의 전반적 만족감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제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사회개혁의 이슈라 할지라도 개인의 행복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절망(絶望)과 희망(希望)사이, 이망(二望)계층 - 계층상승인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계층상승과 경제생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절망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의 계층상승과 경제생활에 대해 과거 회고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미래 전망에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

○ 개인의 계층상승과 경제생활에 대한 회고와 전망

- 5년 전과 현재 계층의 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에 따르면 25%의 응답자가 5년 전에 비해 자신의 계층이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22%는 상승, 52.2%는 동일하다고 응답
- 이에 반해 응답자 대부분은 5년 후에 자신의 계층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응답자의 7.2%만이 자신의 계층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55.5%는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음
- 3년 전과 비교한 현재 개인의 경제생활 변화에서 좋아졌다는 의견은 26.5%에 불과. 나빠졌다는 의견은 17.9%, 변화없다는 의견이 55.6%임. 반면 3년후 예상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6.7%에 불과.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8.2%에 달함.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5년 전과 현재 계층 수준이 상승했거나 하락한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5년 후에는 자신의 계층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음. 반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개인들은 5년 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특히 5년 전에 비해 현재 계층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적게 하락했다고 인식한 응답자보다 앞으로의 계층 수준 상승폭이 클 것으로 믿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에서도 개인생활의 변화와 유사하게 과거보다 미래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

○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와 전망

- 3년전과 비교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좋아졌다는 의견은 22.25%에 불과, 나빠졌다는 의견이 28.1%로 더 높음
- 그러나 3년 후 예상은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11.5%에 불과,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1.3%에 달함.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개인적 전망과 전체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차이를 보임. 개인이나 가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국사회 전체, 특히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전망은 하고 있지 않음
- 공정성, 사회통합, 균등한 교육기회 등 한국사회의 운영 원리에 해당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난 반면, 경제적 현실에 해당하는 항목들, 가령 취업기회, 고용안정성, 소득분배 형평성,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 등에서는 앞으로 3년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악화추세가 멈출 것으로 전망

○ 불안한 표준계층 - 계층정치의식

- 중산층은 '불안한 표준계층'으로 누가 중산층의 신뢰를 얻는지에 따라 어떤 정당이 수권정당이 될지가 결정
- 국민의 다수가 스스로 재산과 소득에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기준을 높여 대다수가 서민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소득감소나 노후,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현재 개인의 준비나 사회복지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작용한 탓으로 보임

○ 중산층의 불안요인

- 중산층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후문제 70.5%, 소득/자산의 감소 67.5%, 질병 및 건강문제 56.7%, 고용문제 56.3%였음
- 문제는 이들 위험요인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임. 10년 후 불안요인을 물어본 결과 중산층 응답자들은 노후문제 80%, 질병 및 건강문제에 75.5%, 소득이나 자산 감소에 74.4%가 걱정된다고 답해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
- 초중등고생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경우는 자녀교육이 가장 큰 걱정일 뿐 아니라 노후나 고용, 소득 감소문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학생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의 경우 자녀교육문제를 불안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81.5%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 감소가 79.7%, 노후문제 78.0%, 고용불안 63.9%였음. (동아시아연구원, 2009)

○ 우리나라 중산층의 특별한 불안감

- 중산층은 경제·사회적 개념인 동시에 심리적 개념. 불안은 중산층의 본원적 속성이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불안은 특별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거주 밀집성으로 인해 이웃을 의식하지 않고선 한시도 살 수 없는 시스템
- 삶의 만족감은 이웃과의 비교로 결정된다는 이른바 ‘이웃 효과’는 한국인 삶의 전 국면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상층지향성이 높은 동시에 하층으로의 전락을 두려워하는 중산층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남
- 객관적 생활조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격차가 더 크게 인식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산층 의식의 소멸을 재촉했다는 견해

-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심함. 제도 및 사람에 대한 신뢰 비교(-100~100의 값을 갖는 지표)에서 가족에 대한 신뢰가 39.4로 제일 높고 대통령이 16.6, 직장 동료 15.5였음. 반면 국회는 조사대상 중 압도적 꼴찌인 -36.5로 불신이 가장 컸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한국갤럽의 2013년과 2014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정당지지도를 보면 5단계로 구분한 주관적 생활수준의 '중'에 해당하는 집단은 전체 지지도에서 $\pm 2\%$ 의 편차를 보일 정도로 지지도의 '표준계층'임
- '중하'집단을 중산층에 포함시킨다면 '중하'계층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7%, '잘못하고 있다' +6%까지 비판적 계층이며,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 지지 -7%, 새정치민주연합 +3%까지 새누리당에 비판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지 않는 계층임
- 중산층의 본원적 속성인 불안, 특히 한국 중산층의 특별한 불안감은 중산층을 언제든지 불신·불만·불안의 '3불계층', 즉 정치적으로 비판적 계층으로 전환 가능

○ 불신·불만·불안의 3불계층

- 2009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비판적이고 소외감과 불만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정부 정책이 가장 잘 대변하는 계층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 중산층의 67.1%가 상위계층이라고 응답했음. 이에 대한 다른 계층의 응답율은 빈곤층 56.5%, 상위층 60.6%였음
- "정부는 소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 계층 가운데 중산층 집단에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음. 이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의 비율은 중산층 67.3%, 빈곤층 57.6%, 상위층 61.7%였음. 정부 정책이 상층계급만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적 불신과 불만이 중산층 사이에 특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동아시아연구원, 2009】

- '상/중상'계층은 대통령 지지도에서 평균보다 더 지지하다가 최근 약간 비판적 집단으로 변모했으며,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6%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거의 평균 지지를 하고 있음
- '하'계층은 대통령 지지도에서 +8%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을 +6%, 민주당을 -5%까지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

층입

- 다른 조사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객관적 중산층은 박근혜 후보 대비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주관적 중산층은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음. 객관적 계층의 지지도는 연령효과가 중첩된 것으로 추정

○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대선후보 지지도

- 2012년 대선에서 계층별 투표 패턴을 보면 객관적 계층에서 하층의 '계급배반투표'가 명확하지만 주관적 계층에서는 불명확
- 특히 객관적 조건의 중산층에서 박근혜 후보 대비 문재인 후보의 격차가 가장 적었지만 주관적 조건에서는 '중위'계층에서 오히려 가장 격차가 컸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구분	계층	박근혜	문재인	격차
객관적 조건	핵심 중산층	58.4	41.6	-16.7
	주변 중산층	57.2	42.8	-14.4
	하층	66.7	33.3	-33.4
주관적 조건	상위	59.8	40.2	-19.6
	중위	65.2	34.8	-30.4
	하위	63.1	36.9	-26.2

-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계급배반투표 현상은 전 연령층에서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 5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40대 이하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5분위 소득계층의 1분위 고소득층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5.9%, 2분위 중산층 상위집단은 8.7%에 불과. 3분위 중산층 하위집단은 21.8%. 그러나 4분위 저소득층 상위집단과 5분위 극빈층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각각 44.7%, 51.3%로 급등.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고연령층이라는 뜻. 즉 저소득층의 보수정당 지지는 상당부분 연령효과가 중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주관적 중산층의 정치의식이 '중'과 '중하'계층에서 다르듯이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과 가치관, 행태를 지닌 중산층에 대한 정치의식 세분화 필요

○ 중산층의 마케팅 세분화 사례

- 9%의 '에비부유층(Almost Rich)' : 60%가 대출 이상의 고학력 소비층으로, 부와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도시 고소득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동경하는 성취 지향적 가치관.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함께 도전정신을 보유하고 있어 고소득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집단. 해외 문화 및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트렌드를 주도. 20대의 미혼, 맞벌이 가정의 비중이 높고 주로 대도시와 그 주변에 거주함
- 24%의 '전형적 중산층(Typical Middles)' : 주로 30-40대 부모와 성장기 자녀로 구성되는 전형적 중산층 집단은 일, 건강, 가족을 고르게 중시하는 균형적 가치관을 갖고 있음. 개인보다는 가족애, 세대간의 친화를 중시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및 소비생활을 추구. 자녀의 제품 및 트렌드 정보력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정보가 자녀를 통해 부모 세대로 전파
- 29%의 '무관심한 중산층(Inward & Unconcerned)' : 주로 40~50대 부모와 청소년 이상 자녀로 구성되는 무관심한 중산층은 대도시 주변과 소도시에 거주함. 생활 만족도가 낮고, 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부족한 체념형 소비층. 대기업, 고소득자 등 기득권에 부정적이지만 상위 소득층에 대한 동경도 큰 편. 사회교류에 소극적이고 잠재된 불만을 쉽게 표출하지 않는 경향. 소비 관심도가 낮고 습관적으로 반복 구매함
- 38%의 '생계형 중산층(Surviving & Conservative)' : 50대 이상 비중이 36.9%를 차지하며 소도시 및 시골에 거주하는 생계형 중산층은 생필품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지만 저소득 경계 소비층으로 소비의 폭은 제한적. 돈과 건강 등 인생의 기본 요인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성취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 또한 가부장적 가치관과 보수적 소비성향을 갖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2007 】

2. '중산층 정치' 프레임

○ 이기는 진보의 수권 공식

① 분노가 아니라 희망(hope, not anger)

- 상대방의 극단적 행태, 실수를 바라는 반사이익에 기초한 분노의 정치는 수권 정당이나 항의의 정당, 시민단체식 마인드
- 분노는 대안 없이 적대적 공존의 정치에 안주하는, 태생적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는 보수적 세계관의 DNA.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의 승리 공식은 변화를 '희망'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약속이 아니라 도전(challenge, not promise)

-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무엇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공약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음
- 더 잘살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을 뒷받침하며,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실현하는 비전과 도전의 정당이 되어야

③ 전선이 아니라 아이디어(idea, not front)

- 시끄러운 소수의 선악이분법 관념으로 손쉽게 변질되는, 장기적 해결을 요하는 거시적 구조에 기반한 전선의 정치는 당장의 일보전진을 원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에게 무능으로 비취짐
-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제로섬 게임의 속편한 고정관념을 넘어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초당적 아이디어를 선점, 실천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정치 긴요

○ 미국 민주당의 '중산층 정치'

① 클린턴의 '제3의 길'

- 1980년대 신우파의 서민정멸의 '부자 정치'와 구좌파의 부자 적대의 '서민 정치'의 적대적 공생의 정치를 타파하는 '잊혀진 중산층(the forgotten middle

class)'의 제3의 길 추구

- “일하고 세금을 내고 아이를 키우고 규칙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잊혀진 중산층을 구성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이름으로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를 자랑스럽게 수락합니다. 나는 중산층의 산물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 친애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 또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우리가 제시하는 선택은 보수적이지도 좌파적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방식에서 이는 공화당 또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이는 다릅니다. 이는 새롭습니다. 이는 작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의 비전과 가치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② 오바마의 ‘아메리칸드림’

- 오바마는 2008년 대선에서 ‘희망’과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에 기초, 중산층의 꿈, 아메리칸드림을 복원하는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we can believe in)’ 설파
- 2012년 대선에서는 ‘버림받은 중산층(smashed middle class)’에 주목,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It's middle class, stupid!)’에 기초, 중산층 동반성장의 ‘진진(Forward)’ 메시지
- “미국의 힘은 언제나 상승하는 중산층에 기초해 있다. 근로와 책임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은 버림받았다. 오랫동안 국민의 실질소득은 오르지 못했고 경제위기는 국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해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의료비용을 낮추고 사회보장을 튼튼히 하자.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아메리칸드림을 믿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It's middle class, stupid!)

○ 영국 노동당의 ‘중산층 정치’

① 블레어의 ‘제3의 길’

- 1997년 블레어의 신노동당의 매니페스토는 중산층 진입 ‘열망’을 ‘욕망’으로 경멸하는 ‘질투의 정치(the politics of envy)’를 폐기함. 노동당을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성취와 열망의 정당(the party of achievement and aspiration)’, ‘사회이동의 정당(the party of social mobility)’으로 현대화. “우리는 야망과 온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는 사회를 원한다.”
- “노동당의 토대는 당이 창당되어 대변하려는 사람들이다. 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해관계와 태도를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좌파의 신화가 아니다. 노동자와 중산층 모두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 노동당은 오랫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잘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의 향상과 행복은 정치를 의미있게 만드는 우리의 중심적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당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결국 당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노동당의 궁극적 토대는 도그마도 아니고 심지어 가치도 아니다. 그것은 보통사람들의 희망과 열망이다.”

② 밀리반드의 ‘온국민 정치’

- 밀리반드는 ‘고통 받는 중산층(the squeezed middle)’의 열망과 불안을 대변하는 온국민 정치(one nation politics) 역설
- “고통 받는 중산층의 열망과 불안은 우리의 정책재검토와 영국을 변화시키는 계획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노동당이 우리나라의 고통 받는 중산층과 열심히 일해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재집권하는 것입니다. ... 나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노동당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굴복하지 않고 다수를 대변하면서 정치의 중도를 형성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번영과 성장의 미래 동력에 대한 초점이 우리의 정책재검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좋은 경제와 좋은 사회의 토대이고 나는 그 핵심을 이해하는 정당을 이끌고 있습니다.”(당대표 수락연설)

○ 희망의 정치

- 수권정당은 비관주의에 근거한 분노의 정당이 아니라 낙관론에 근거한 희망의 정당
-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느 순간 '중산층'이 '금기어'처럼 되었음.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꿈'을 대변해야

○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

① 비관주의

- 새정치민주연합의 메시지는 비관적이지만 국민은 자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
- 비관주의는 수권정당의 리더십과 비전이 아닌 불임정당의 수동성과 무력함을 의미. 비판과 비관을 동일시해서는 아니 됨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능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대한민국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어야

②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믿음

- 쇠퇴의 메시지는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없애버림
- 전반적인 경제의 힘과 국민이 직면한 진정한 압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
- 국민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국민의 혁신의지를 믿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힘을 강조해야

③ 개인의 성공의 기회보다 경제적 안전을 강조

- 새정치민주연합은 성공을 향한 개인의 열망, 보통사람의 소박한 꿈을 폄하하고 있음
-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원하는 서민의 꿈을 보통사람의 언어로 확신을 갖고 말해야
- '중산층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 ※ “가장 강할 때, 민주당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이었다. 기회는 다른 무엇보다 민주당을 단결시켰던 가치이다. 우리는 기회의 정당(the party of opportunity)이다. ... 우리가 국민의 성공을 돕는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우리가 기회의 정당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 ※ “노동당은 영국정치에서 자연스런 중도정당(the natural party of the centre)이 되어야 한다. 진보적 중도로부터 노동당은 분명한 가치에 근거한 정치를 공약해야 한다. 노동당 비전의 핵심에 사회이동(social mobility),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 시민자활(citizen empowerment)의 공약이 있다. ... 개인의 자활, 생활기회의 향상, 궁극적으로 사회이동의 향상을 위한 분명한 공약은 우리의 모든 개혁을 관통하는 공통의 핵심이다.”

- 수권정당은 분석의 정당, 항의의 정당이 아니라 실천의 정당, 문제해결의 정당임.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동반성장’, ‘혁신경제’의 해법을 전면에 내세워야
- 이는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계층상승하는 전반적 상향이동 전략(general upward-mobility strategy)을 기안하는 것임
-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산층의 꿈’을 확신을 갖고 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도약할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이 될 수 없음

○ 통합의 정치

- 수권정당은 부자를 적대하고 중산층을 무시하는 부자 vs 서민의 제로섬 게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중산층 강국으로 만드는 통합의 정치 지향
-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으로서 시끄러운 소수의 배제의 정치, 격돌의 정치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재건, 확대, 강화하

- 는 포용의 정치,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열망하는 문제해결의 정치를 대변해야
- 이는 정치불신을 가속화시키는 무임승차의 '루저'와 승자독식의 탐욕간의 그릇된 양자택일을 넘어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식'을 실현하는 '성공의 정당'을 자임하는 것임
- 또한 이는 진보의 '온정 vs 냉혹'의 구도와 보수의 '유능 vs 무능' 구도를 넘어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정당'의 면모로 일신하는 것임. '따뜻하지만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진보정당은 '냉혹하지만 유능'한 것처럼 위장한 보수정당에게 필패

○ 포용의 정치

-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신빈곤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에서는 '언더클래스(underclass)', 양극화(polarization), 일본에서는 '격차사회', 프랑스에서는 '이중 속도 사회(two-speed society)', 독일에서는 '2/3사회(two-thirds society)', 덴마크에서는 'A팀과 B팀(A-team and B-team)', 우리나라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유행
-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평등과 불평등의 논의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대체되었음. 사회적 포용/배제는 안과 밖의 수평적 축이고 평등/불평등은 위와 아래의 수직적 축. 즉 포용/배제는 기회의 평등에 입각한 중산층 확대의 공동체의 상을 갖고 있는 반면 평등/불평등은 지배 또는 착취와 연관된 결과의 평등에 입각한 계층 모델을 전제
- '사회적 배제'는 기회의 구조적 결여로써 덮에 빠지는 것(entrapment)을 의미. "사회적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단절되어 사회가 제공하는 주류 기회들로부터 개인들과 집단들을 고립시키는 박탈의 다차원적이고 상호 강화하는 과정들의 조합"
- 제3의 길의 새로운 정치는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방향전환. 제3의 길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2000년 리스본 유럽연합 이사회는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가 되는 것을 유럽연합의 다음 10년간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 전략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으로 유럽의 사회모델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선언

3. '중산층 정치'의 정책방향

○ 민생민주

- 지난 10여년간 연전연패와 처참한 지지도에 직면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를 반영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 반독재민주화 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민주개혁'으로 자임.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평화민주' 자임
- 최근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으로 자칭.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과의 후보단일화 또는 연대 등, 반사이익 선거연합을 반영
-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의 명칭은 총선과 대선 패배로 재검토 요구받음.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진보'의 유의미한 연대세력이 더 이상 없는 상태
-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의 속편한 고정관념에 안주하는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민생민주'의 새로운 명칭 필요
-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중시함과 함께 '민주'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명칭
-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변화를 반영하는 '민생'과 '민주'의 방향전환 또는 강조점 이동 필수

① 민생

- '민생'을 앞세움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제일주의 정당'임을 자임
- 여기서 '민생'은 중산층을 재건하고 확대하는,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에 근거
- 성장을 경시하는 구좌파의 '분배경제론'과 우파의 '소수 기득권 경제성장론'과

대비하여 '혁신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성장과실을 서민의 중산층화와 중산층의 강화로 돌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에 입각한 중산층 성장경제론으로 방향전환

- 중산층 성장경제론은 무엇보다 지식기반산업, 금융산업,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산업·정밀기계산업·방위산업, 중소벤처산업 등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을 일으키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할 '국가존망기술'을 비롯, 신성장동력을 창출, 활성화하는 '혁신경제'의 정책기조로 대전환하는 것을 전제
- 이를 뒷받침할 세제대개혁을 단행하여 '번 돈'의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의 세율을 높이고 불로소득을 줄여 경제활동을 진작

○ 혁신경제학(Innovation Economics)

	신고전 경제학	케인즈주의 경제학	혁신 경제학
경제성장의 위치	공급측면 (개인, 조직)	수요측면	공급/수요 측면 (조직, 기업가, 프로슈머)
경제성장의 근원	자본 축적	지출	생산성과 혁신
정책의 궁극적 대상	소비자	노동자	모든 주민
경제정책 주요 목표	성장과 경기변동 관리	공정성과 경기변동관리	성장과 혁신
핵심 경제과정	배분 효율성	소비자 수요, 완전고용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
주요 수단	최고한계세율 및 자본세 인하, 규제완화	공공지출, 누진세, 규제강화	새로운 장비, 경쟁, 기업가정신에 대한 혁신, 숙련,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 지출, 규제정책
정부 조직	제한적	크고 강력한 정부	정부 혁신, 민관파트너십
활동의 위치	시장	제도와 조직	제도와 조직

- 신우파의 신고전경제학과 구좌파의 케인즈주의 경제학과 달리 제3의 길의 혁신

경제학은 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원리에 입각

- “효율적인 성장 전략을 기안하기 하기 위해 오늘날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의 현실에 근거한 실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성장이 우리의 생활수준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성장경제학의 프레임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급측면 경제학이 ‘자유’를, 수요측면 경제학이 ‘공정성’을 핵심목표를 설정한다면 혁신경제학은 빠르고 광범한 ‘동반성장’을 설정함
- 혁신경제학의 초점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노동의 질을 높이는 생산성 향상과 동반 성장을 통해 임금과 소득을 증대하는 것임. 즉 혁신을 통한 소득 증대가 경제정책의 중심
- 혁신경제학의 근본적 통찰은 혁신은 제도의 맥락에서 일어난다는 것임. 신우파의 부자의 낙수효과나 구좌파의 부지중세의 양자택일을 넘어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술혁신, 기업가정신, 고숙련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을 창출하는 것에 맞춰야
- 혁신경제학은 지식, 숙련, 투자 등 공급측면과 동시에 성장과 혁신을 증대하는 요소, 즉 새로운 지식, 숙련, 장비 등의 수요측면을 동시에 존중
- 부는 기업으로부터 발생, 성장친화적이면서 동시에 반기업적인 것은 불가능. 그러나 혁신경제학은 맹목적인 친기업이 아니라 혁신친화적, 생산성친화적임

○ 혁신경제학의 혁신 정책 기조

- 창조적 자극(Inspiration) : 야심찬 목표를 설정
- 의지(Intention) : 혁신기반경쟁력을 국가의 최우선순위로 설정
- 통찰(Insight) : 혁신 성과의 이해
- 인센티브(Incentives) : 혁신, 생산, 일자리 장려
- 제도(Institutions) : 혁신과정을 방해하는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적, 촉진적 정부 혁신
- 투자(Investment) : 혁신을 위한 공적 펀드 증대
- 정보기술(IT) : 정보기술은 오늘날 혁신의 주요 근원

- 민생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단순한 안전망(safety net)을 넘어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보통사람의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약대(spring board)로 기능하는 기회의 네트워크(opportunity net)를 구축하는 것임
- 보편 vs 선별의 철지난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제도전 복지 전략'을 기안하는 것임
- 기능적으로는 소극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 사전적 복지로서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투자를 강조하는 '활성화(activation)' 전략
- 조직적으로는 국가나 시장이나의 낡은 이분법을 폐기하고 시장, 국가,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체제(welfare regime)의 최적화를 강조하는 다원적 복지의 '복지사회' 전략
- 재정적으로는 생산적 복지로서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전환하는 '사회투자' 전략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임

○ 시장복지

- 시장은 국가, 가족과 함께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복지 제공자 (에스핑 안데르센)
- 우리나라는 상품별 공급자의 수가 거의 3개를 넘지 못하는, 소비자가 극히 불리한 독과점 시장
-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 수입의존도가 아주 높지만 소비재를 아주 적게 수입해 소비개방성은 매우 낮음 (소비개방도 OECD 34개국 중 29위)
- 질 좋고 값 싼 상품은 그 자체 시장이 창출하는 복지.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규제 혁파와 규제 신설 필요. 가령, 독과점 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을 없애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 필요
- 최근 '직구 열풍'은 우리나라 독과점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처절한 몸부림. 2013년 처음으로 해외직구 1조원 시대를 달성했는데, 불과 1년만인 2014년에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 해외직구를 20대에서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활용, 초기에는 의류나 신발, 또는 유아용품처럼 주로 주부들의 관심 품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카메라, 컴퓨터, 전자레인지, 심지어 TV까지 해외직구의 대상 품목이 됨. 대체로 2배 이상 4배까지 저렴하다는 평

- 가령, 450만원의 삼성 스마트 TV의 경우 미국에서 직구하면 관세, 운송비 포함해도 215만원에 불과
- 스마트 폰의 경우 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하는 등, 공급자를 위한 ‘단통법’으로 미국 월마트처럼 이동통신사와 2년 약정으로 갤럭시S5 8만원, 아이폰6 14만원에 판매, 독일처럼 2년 약정으로 갤럭시노트4를 0원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
- 이런 시장복지의 위력은 가령,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것임

② 민주

- ‘민주’는 민주화 시대의 민주 vs 반민주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격돌의 정치’를 넘어 민주화 이후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복원, 정치를 정상화하는 ‘신뢰의 정치’
- ※ “타협이 전혀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 단어는 ‘타협’일 것이다.”(알린스키)
- ‘박근혜 정치’는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의 정치에 대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혐오를 활용, 정치를 행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여론조사의 상시화에 대응해 진영간 여론조사 우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실종의 정치’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치의 ‘행정화’와 ‘시민운동화’의 시끄러운 소수의 그릇된 좌우 편향을 거부하고 오직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꿈을 대변하는 ‘정치 정상화’의 정당을 자임해야

○ 정치정상화

- “우리 정치가 불신을 사는 이유는 간단하다. 엉뚱한 것을 두고 다투느라 정작 보통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 즉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두고 각자의 해법이 더 낫다며 경쟁하지 않고 정치·도덕적 의제를 놓고 선악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무능 중에 이처럼 할 일 안 하는 무능이 최악이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차원으로 다투면 타협이 어렵다.” (이철희, 한겨레, 2014.10.15)

○ 중산층 재건

- 중산층이 되기를 원하는 서민과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여 중산층을 강화하는 중산층 재건 노선은 60년 전통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통성이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꿈

○ DJ의 ‘중산층을 키우는 대중경제론’

- “중산층,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효과도 커지고 부도 멀리 퍼져나갑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하려면 중산층이 튼튼하나 그렇지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중산층이 튼튼하면 하층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고용능력이 커지니까요. 민주체제도 튼튼해지지요. ‘대중경제’의 목표는, 말하자면 중산층을 지원하고 그 밑에 계층을 중산층화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길이고, 경제의 중심이, 허리가 튼튼해지는 길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번영해나가려면 무엇보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 김대중 인터뷰, 역사비평 2008 가을호 】
- DJ는 1967년 민중당 정책의장 시절, 당의 기본성격을 ‘중산층의 정당으로 대중경제 체제 확립’을 기안. 우리나라 최초로 ‘중산층화’ 제기 【 김대중저, 분노의 메아리, 1967 】

○ 노무현의 '중산층 70%'론

-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안정된 경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골고루 잘사는 나라’, ‘중산층과 서민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2002)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 70%의 중산층 시대’ 약속. ‘7% 신성장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 국민소득 증대 및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 등 공약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해고 요건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지역균형발전과 대당평 인사 등,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의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
-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중산층 정치를 벤치마킹, 빼앗아 간 것임. 그러나 대통령 취임후 사실상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폐기
-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자 정치를 복원하는 신뢰의 정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버린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의 실천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